

李 정부 인사청문 ‘슈퍼워크’… 여야 거센 공방 전망

18일까지 장관 후보자 16명
민주 “청문회서 소명” 엄호
국힘 “강선우·이진숙 부적격”
강훈식 “국민들 판단만 남아”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 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낙마는 없다”며 전방위적 엄호 태세에 들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송곳 검증을 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14일부터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

고위 공직자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	
14일(월)	16일(수)
정동영 통일부장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17일(목)
15일(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 현 외교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8일(금)
권오을 국가보훈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1일(월)
	김성환 헌법재판소장

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개최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이날 열린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됐다.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8일에는 윤

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고됐다.

이 가운데 가장 날 선 공방이 벌어질 ‘전장’은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14일)와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16일)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부처 수장 자격이 없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들의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인

선 반대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도 부각하면서 낙마 공세를 퍼붓고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강 후보자를 비롯한 다수의 장관 후보자를 ‘의혹 종합세트’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중 국민 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고 보고 엄호 태세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객관적 사실보다 일방적 주장과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하며 청문회를 왜곡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정한 절차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내에서도 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우려도 일부 감지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게임의 룰’인 인사청문제도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대상자의 신상·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 추천을 마무리한 소회를 밝혔다.

강 실장은 “물론 (눈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 (라는 대통령의 말)이 돌아올 때면 인수위원회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며 “그렇다 보니 기사 하나하나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저희 탓인 것만 같고 우리가 둔감했을까 싶어 잠 못 이루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 남았다”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심경을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李 대통령, EU 윤여준·佛 강금실 특사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중 4곳의 특사단 명단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기로 했고, 단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손명수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특사단장으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으며, 강 단장은 단원인 민주당 한병도·천준호 의원

과 함께 15일 출국한다.

16일 영국으로 향하는 특사단은 단장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 단원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단을 맡아 16일 출국하기로 했고,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계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이달 말께 폴란드 특사로 파견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소비쿠폰 지급금 사전 알림 서비스 오늘부터 신청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 고 13일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

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31일 신규가입 이벤트를 한다.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소정의 음료 쿠폰을 준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정委 “개헌·조직개편, 끝까지 꼼꼼히”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13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업무기간 총 60일 중 절반가량인 4주를 소화한 가운데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논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개헌이나 정부조직개편 등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개편의 경우 그동안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가 이뤄졌으나, 국정기획위 측은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의대생 전원 복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회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발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이선우 비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회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관련기사 1면

연합뉴스

민주, ‘尹정부 거부법안’ 재처리 속도전

‘방송3법·농업2법’ 절차 돌입 ‘더 센 상법’도 7월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42건(중복 포함)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농업 2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이른바 ‘농업 4법’ 가운데 재해 관련 2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

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관련 소위를 넘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이미 상임위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보완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당시 기존 민주당 안에서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두는 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거부권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사실상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회 심의를 한 차

례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는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을 심사하는 제2소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막대한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거치는 등 속도 조절 기류가 감지된다.

농업 4법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이 법의 경우 올해 수확기 중 처리를 목표로 하되 재정 부담 경감책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통과 시 연간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추가 상임위 논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울=김선욱 기자